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 光日春秋



정용환 원자력연구원 원자력재료기술개발팀장

우리가 사는 세상 곳곳은 지식재산으로 가득하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휴대전화 속에만 수십만 개의 특허가 숨어 있다. 세계는 지금, '보이는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로 변화하고 있으며 세계 경제 질서는 지식 재산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구글이 모토로라 모빌리티를 약 13조 원에 인수한 것은 기업이 탐나서가 아니라 모토로라의 특허가 탐났기 때문이다. 삼성과 애플의 세계적인 특허 대결도 미래의 기업 기치는 특허에 의해서 좌우되고 세상의 기치는 창조성에 의해서 좌우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상징적 사건이었다. 유럽법 르네상스와 산업혁명도 특허를 통해 발전해 왔다고 말할 수 있다. 15세기 이탈리아에서는 특허 기술에 대해서 독점권을 부여함으로써 과학자들에게 르네

## 지식재산은 국가 미래 경쟁력이다

상스의 불꽃을 번지게 했고, 16세기 영국은 과학자들에게 발명품에 대해 독점권을 인정해 주어 이들이 산업혁명의 주역이 되도록 했다. 18세기 미국은 헌법에 특허 조항을 명시했고 이런 제도는 에디슨의 탄생으로 이어졌으며 미국이 세계 경제대국으로 도약하는 밑거름이 됐다. 필자는 과학자로서 좀처럼 경험하기 어려운 8년간의 국제 특허소송을 직접 경험한 바가 있다. 16년간의 장기 연구를 통해서 원자력 신소재 개발에 성공했는데 연구 프로젝트 착수 시점부터 세계 1등 기술을 개발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특허 확보에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이런 과정에서 프랑스 기업 아레바가 우리 특허에 대해 무효 소송을 제기해 8년간의 특허 전쟁을 치르게 됐다. 아레바는 스마트폰에 비유하자면 미국의 애플 정도로 비견될 수 있는, 원자력 분야에서는 세계 최대 회사로 알려져 있는 회사이다. 연구만 하던 필자가 처음으로 외국 기업으로부터 소송을 당했을 때는 너무도 당황스러웠다. 더욱 어려웠던 점은 이 건에 대해 도움을 주는 시스템이 전혀 없다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최종 승소해 특허 전쟁을 마무리하고 산업체에 우리 기술을 이전하는 성공

을 이루게 됐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면 16년간 매진했던 신소재를 개발하는 연구보다 8년간의 국제 특허 소송이 필자에게는 더욱 힘들고 악몽 같은 시간으로 기억된다. 중소기업이나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서 아무리 우수한 세계적인 신기술을 개발한다고 해도 글로벌 대기업으로부터 국제 특허 소송을 당했을 때 과연 얼마나 버티고 승리해 우리 기술을 지켜 낼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기기 된다.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은 그나마 특허에 대한 보호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대응 시스템이 빈약한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장기간의 소송에 매달리다 보면 기업은 성장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만약에 승소해 특허를 지켜 낸다 해도 보상비용은 터무니없이 낮기 때문에 기업은 이미 도산 위기에 빠지게 된다. 한국은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특허출원이 많은 특허 강국이다. IT 강국답게 특허출원이 많아지고 있는데 그러나 실상을 들여다보면 개선해야 할 점이 많이 있다. 특허를 보호받지 못할 확률이 여전히 높은 것이다. 우리나라는 특허 침해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특허 무효 판정을 받을 확률이 50%를 넘어간다. 특허를 보호받지 못하는 나라에서 과연 누가 적극적으로 연구 개발에 매진해 특허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지점이다. 특허 심사 과정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서 확실한 기술에 대해서만 특허를 등록시켜 주고, 일단 등록된 특허는 잘 보호해 줘야 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다. 이렇게 해야 기업인이 국가가 인정해 준 특허를 믿고 사업을 할 수 있으며, 추후 특허가 무효가 되어 사업이 도산하는 불행한 일은 막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승소하면 손해배상을 받게 되는데 손해배상액이 터무니없이 낮다. 그래서 특허 기술을 침해당해도 실질적인 보상이 어렵다. 따라서 특허 소송에 따른 보상액을 현실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아울러 유럽의 특허청처럼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기술판사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최근 정부에서는 기술료에 대해서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이것이 과연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한 방향인지에 대해 정책 입안자들이 다시 한 번 진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국가의 미래 경쟁력은 지식재산에 의해서 그 운명이 좌지우지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지식재산 선진국으로 가는 길에 국가적인 차원의 고민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 종교칼럼



장형규 원불교 광주교구 사무국장

세계사적으로 1789년은 매우 상징적인 해이며 중요한 해입니다. 바로 기존 유럽 사회를 유지하던 군주국가를 시민혁명을 통해 무너뜨리는 프랑스혁명이 일어난 해이기 때문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민주주의라는 새로운 막이 오르게 된 것이죠. 루이16세는 정치적인 견해가 없었으며 자신감이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 루이15세가 죽은 뒤 자연스럽게 왕위를 물려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정치에 대한 무지로 인해 자신의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권력을 위임해 통치하는 것으로 재임초부터 왕의 위상이 추락하게 됩니다. 프랑스 전역에서 시민운동이 커져가고 있었지만 루이16세는 혁명의 불길 이 스스로 꺼지리라는 기대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조치는커녕 사냥과 자물쇠, 돌조각 따르는 개인취미시

## 루이16세 데자뷰, 그리고 정의

간에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그는 이 난관을 헤쳐나가기 위해 국면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전쟁에서 지게되면 자신의 권력을 되찾을 수 있을 거라 판단하여 의회를 부추겨 오스트리아와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전쟁의 의도를 의심한 파리 시민은 필리리궁에 쳐들어 오려 그러 그 곳을 점령하고 왕권을 일시정지시키고 국민공회로부터 사형 찬성 387표, 반대 334표로 사형을 선고받고 1793년 1월21일에 파리의 혁명광장의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지게 됩니다. 역사적인 과업을 수행한 프랑스 국민공회는 그러나 또다시 내부분열이 발생하고 국민공회의장에서 대중적인 변화를 취하던 자코뱅파는 왼쪽에 앉고, 체제를 고수하려는 지롱드파는 오른쪽에 앉았다 해 좌파, 우파라는 말이 생겼고 현재까지도 그 개념은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왜 굳이 300년이 넘는 이야기를 이리 길게도 이야기하는가? 박근혜를 탄핵시킨 그 배경과 내용, 그리고 철자가 역사의 데자뷰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탄핵이후 프랑스의회가 분열됐던 것처럼 우리들은 분열의 여파가 거듭되는 안팎입니다. 좌파, 우파를 좌익과 우익이라는 말로도 표현합니다. 그것은 날

개는 한쪽 날개만 있다면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지금의 시기가 왼쪽으로 날 시기인가, 아니면 오른쪽으로 날 시기인가에 따라서 좌익과 우익의 힘은 조절이 되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좌익과 우익의 힘을 잘 조절해 사안에 따라 운전을 잘 해나가는 것이 바로 '중도'(中道)일 것입니다. 이는 현실세계의 이해관계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입장에 분명한 편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편이 생기는 것이 지극히 마땅한 것이며 편이 생긴다하여 죄책감을 가질 필요 또한 없는 것입니다. 다만 그 편을 들때에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편에 해당하는 이유가 내 개인적인 이득이 되는 이유인가? 아니면 상식적이고 보다 많은 이들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아야 된다는 이유인가? 몇 년전 우리 사회에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정의의 열풍을 일으킨 마이클 셸던교수는 한마디로 "정의란 모든 것을 고려해 일관된 관점에서 모든 것이 서로 맞아떨어질 때 그 정의의 개념이 정당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좀 더 쉽게 말하면 인간으로서 상식적인 수준에서 객관적인 수준에서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그것이 맞다고 하는 것이 정의라는 것입니다.

### 기 고



임일도 동강대 교수·전 한국헌법학회회장

수십 년간 대학에서 헌법을 강의해 온 필자는 요사이 크게 보람을 느낀다.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으로 대통령직을 상실한 것을 계기로 헌법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가장 높기 때문이다. 아마도 지난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최근 30년 사이에 가장 높은 관심인 것 같다. 헌법의 정의는 다양하나 일반적으로 '헌법이란 국가의 근본규범으로 국가의 통치구조의 원리를 규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국가의 최고법이며 기

## 헌법대로 하자

본법'이라고 한다. 우리 헌법은 전문, 제1장 총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기본권), 제3장 국회, 제4장 정부, 제5장 법원, 제6장 헌법재판소, 제7장 선거관리, 제8장 지방자치, 제9장 경제, 제10장 헌법 개정 그리고 부칙으로 나누어 규정되어 있다. 이 중에 대표적인 조문 하나를 보면, '제1조 제 ①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 ②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이다. 헌법 학자들은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로 국민주권의 원리, 자유민주주의 원리, 기본권 존중주의, 범치국가 원리, 사회국가원리, 문화국가원리, 권력분립원리, 국제평화주의 등을 들고 있다. 또한 통치구조와 원리에 관한 규정은 모두가 제2장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한다. 필자는 수십 년 동안 강의 시간에 학생들에게 '헌법의 조문 하나 하나는 마치 교

회의 성경 말씀 이상으로 무게를 가지고 있으며, 전 국민(시민)은 반드시 배우고 읽히고 실천해야 할 교양 필수 과목'이라고 강조해 왔다. 단순히 조문의 뜻이나 관련 이론을 가르치는데 그치지 않고, 마치 국민 계몽운동의 일환으로 생각하고 우리 현정사와 현실, 그리고 앞으로 국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힘주어 가르쳤다. 그래서 수십 년 전부터 강조해 온 것들이 지금 와서 국가·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되어 논의되고 하나씩 실현되는 것을 보면서 큰 만족은 아니지만 보람을 느낀다. 요사이 우리 시민들에게 헌법의 정신과 그 내용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은 헌법학자나 헌법재판소가 아니고 아이로니컬하게도 개그맨 김재동씨 인 것 같다. 그의 말처럼 자기는 '전문대밖 에 못 나왔고 법학 전공자도 아닌 연극영화과 출신'인데도 그의 헌법전파력은 대

이제 정치권에서는 보수,진보와는 상관없는 통일,안보논리로 좌파니, 우파니 하는 이념논리로 국민을 편가르고, 당파의 이익에 따라 동(東)이니,서(西)니 하는 지역논리로 국민분열을 부추키는 구시대적 정치행위는 사라져야 하겠습니까. 오직 '정의사회 구현'이라는 시대적 대 사명을 가진 과제에 매진하여 적폐청산을 통한 개혁과 회복, 통합의 가치를 실현 해가야 하겠습니까. 루이16세가 단두대에 섰을 때 마지막으로 한 말은 "짐은 죄없이 죽노라"였다고 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처럼 힘들고 아픈 것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눈앞의 이익이 아닌 더 나은 가치와 삶을 위해, 또 정의사회 구현을 위해 찢기 게 아프더라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지도자일수록 필요한 덕목입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는 '용기'라고 합니다. 탄핵은 끝이 아니라 어쩌면 시작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정의사회 구현이라는 큰 가치아래 행복한 국민의 삶을 이뤄 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의든 죽기로써 실행하고, 불의든 죽기로써 실행하지 말라.' 이는 우리 사회가 맑고,밝고,훈훈한 사회가 되기 위해 변하지 않는 가치덕목일 것입니다.

단하다. 수만 명이 모인 대중집회에서 헌법 제1조 ①항 ②항을 외치고, 심지어 어떤 집회에서는 헌법 제1장 총강 제2장 국민의 권리 (기본권) 조항을 거의 모두 외치면서 현실을 지적하고 비판하며 시민들을 계몽한다. 이를 본 필자는 강의실에서 강의만 하는 것이 부끄러워 최근에는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라는 단체에서 만들어 보급하고 있는 '손바닥 헌법책' 수 백권을 구입(큰 돈이 필요하지는 않음)해서 주위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는 것이다. 이 책자 맨 끝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헌법대로 하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대로 하자! 모든 국민은 인간답게 살 권리를 가지며,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헌법대로 하자고.

### 社 說

## 3년의 기다림...세월호 진실도 함께 인양을

정부가 세월호 참사 3주기에 맞춰 그동안 차일피일 미뤘던 세월호를 인양하겠다고 약속해 주목된다. 윤학배 해양수산부 차관은 옛것제 "세월호 3주 기인 다음달 16일까지 목포신항에 세월호를 가지할 수 있도록 인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진도군 임회면 팽목항 세월호 가족 대기실에서 열린 미수습자 가족들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 같이 다짐했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세월호 인양 시점은 팽목수로의 물살이 약해지는 다음달 5일이 된다. 국민은 이번야말로 정부의 인양 약속이 허언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정부는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침몰 이후 그동안 수차례 선제 인양을 약속했지만 기술과 현지 기상 여건 등 각종 핑계를 대면서 인양을 미뤘 왔다. 이 때문에 3년째 세월호는 여전히 희생자 9명과 함께 진도 앞바다에 잠들어 있다.

이제 세월호 인양을 결정한 만큼 정부는 최대한 안전하고 신속하게 끌어올리는 데 국가 차원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세월호 인양은 '무능했던 정부'가 미수습자 가족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이자 그 가족의 아픔을 달래는 일이기도 하다. 이들은 사고 이후 현재까지도 1060여 일째 팽목항 임시 컨테이너에 머무르며 애타게 잃어버린 가족을 찾고 있다. 유족의 고통을 생각한다면 선제 인양은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국민은 세월호 인양이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월호는 진상 규명의 핵심이지만, 선체가 인양되지 않아 진실이 묻혀 있는 상황으로 침몰 과정과 원인 등 사태의 정모가 밝혀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세월호를 차질 없이 인양해 그동안 제기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다시는 이 같은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역사적 교훈을 되새겨야 할 것이다.

## 피의자 박근혜 소환 검찰 이번엔 제대로 해야

'피의자 박근혜'가 다음주 포도라인에 설 것으로 보인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오는 21일 검찰청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고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검찰이 요구한 일시에 출석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전두환·노태우·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한정 사상 네 번째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는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청와대를 떠나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갔다. 피의자 신분인 박 전 대통령은 특검과 검찰로부터 뇌물 수수 등 13개의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지금껏 말로만 '진상 규명 협조'를 밝혔을 뿐 검찰과 특검 조사에 한 번도 응하지 않았다. 이번 조사는 작년 10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이래 첫 대면조사인데 어찌라도 검찰 조사에 응하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제 박 전 대통령이 다음 주 포도라

인에 서서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 많은 사람이 주목하고 있다. 지난 12일 청와대를 떠나는 날까지도 대리인을 내세워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다"며 사실상 불복 메시지를 내놓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재라도 무엇이 진정 나라의 분열을 막고 국민을 통합하는 길인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검찰 또한 정치적 고려 따위로 좌고우면할 게 아니라 당당히 수사함으로써 그동안 구겨진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 '법 앞의 평등'이라는 원칙대로 신속하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할 것이다. 우려스러운 것은 증거 인멸이다. 청와대에서 파쇄기를 대량 구입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대통령기록물 지정 절차도 시작됐다. 혐의를 입증할 각종 기록이 봉인되거나 파쇄될 경우 진실 규명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검찰이 청와대와 필요하다면 삼성동 자택까지 압수수색을 서둘러야 할 이유다.

### 無 等 鼓

"드러난 각종 증거에도 재판을 성사시키지 못한 데 실망했을 뿐 아니라 3000만 말레이시아 국민에게 죄(sin)를 지은 느낌이다. 더 이상 '거미줄 법'(spider web laws)을 위해 일할 수는 없었다." 나집 라자 말레이시아 총리의 비자금 스캔들을 조사했던 말레이시아 반부패위원회(MACC) 바흐리 모흐드진 특수조사국장이 지난 1월 일기를 2년여 남겨 놓고 중도 사퇴하며 남긴 말입니다. 바흐리 국장은 말레이시아 국영 투자기업인 'IMDB'의 자회사 'SRC인터내셔널'을 통해 나집 총리의 개인 계좌로 4200만 링깃(약 113억 원)의 뭇치돈이 흘러들어 간 정황을 조사했던 인물이다. 하지만 나집 총리의 측근으로 알려진 진 모하메드 아파디 알리 검찰총장이 이끄는 말레이시아 검찰은 이 돈이 '사우디아라비아 왕가의 합법적 정치 기부금 중 일부'라고 판정했다. 바흐리의 조기 사퇴는 이 같은 배경에서 이뤄진 것인데 특이한 것은 그가 '거미줄 법'을 언급했다는 점이다. 당시 바흐리의 사퇴 선언을 실었던 말레이시아의 온라인 뉴스 포털 '말레이시

아키나'(말레이시아의 오늘)는 이 '거미줄 법'에 대해 '작은 파리는 붙잡지만 더 큰 날것들은 손쉽게 빠져나가 버리는'(small flies get caught but bigger players escape)이라는 설명을 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각종 권력형 범죄의 처리 과정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 또는 '고무줄 법'이라는 비아냥이 지금까지도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세상은 어디나 똑같구나"라는 생 각과 함께 "왜 우리는 이런 검찰이 없나?" 하는 자괴감마저 드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천만 다행으로 우리의 헌법재판소가 국가의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을 상대로 한 '탄핵재판'에서 '8대 0'이라는 만장일치로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거미줄 법'의 선긴 그물코를 바짝 조이는 데 성공했다. 물론 국민의 일치된 여론이 큰 힘이 됐겠지만 앞으로 수사를 진행할 검찰 역시 '힘 있는 자만 빠져나가는 거미줄도 그리고 거미줄 법에 봉사하는 검찰도 이제는 없다'는 것을 단천하에 드러내 보여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홍형기 사회부장 redplane@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집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7-9500)	기획관리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다 지 인 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사회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사회 2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기고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